

# 美-中, 무역협상 두고 환율전쟁 예고

### 미, 중 환율조작국 지정

#### 세계 경제 불확실성 우려 전문가 “중 7위안 방어 해제 무역협상 희망 포기 의미”

미국과 중국이 9월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환율전쟁을 예고하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말 상하이에서 열렸던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했지만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994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지 25년 만이다.

역내·역외 시장 모두에서 위안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넘어서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다.

이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치를 6.9683위안으로 고시하며 위안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역대위안화 환율은 기준환율 상하 2% 범위에서 움직인다. 전날 6.9225위안으로 설정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9위안을 넘긴 데 이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틀째 ‘포치(破七)’가 이어진 셈이다.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는 오전 11시 기준 7.0905위안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의 대(對)중 추가 관세 효과 상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기준환율을 7위안 직전으로 설정한 건 중국 정부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추가로 1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산 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은 양국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을 뒤집으며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을 앞으로 구매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를 연기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약속을 어긴 셈인데, 미중은 서로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비난 중이다.

CNN은 위안화 절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자국 통화를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는 “그들이 환율 7위안 방어를 중단했다는 건 미국과의 무역협상 희망을 거의 포기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CNBC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경고 사격을 가했고, 얼마나 확전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문제는 중국이 추가 절하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중국이 추가 절하를 허용할 경우, 아시아 각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야 하는 시장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통화절하가 계속 이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악영향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세를 더 올리거나, 기타 무역 제한 조치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뉴시스

## “日 금융보복 가능성 매우 낮아”

### 김상조 靑 정책실장, “IMF대와 상황 달라 금융보복 가능성 낮지만 철저한 대비책 강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대와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의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일본이 금융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가”라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여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비중이 낮다”며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가 급락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특히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금융 보복을 통해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설명 드렸고, 호사가 유지 교수도 앞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우리가 일본에 ‘보복 대응’을 할 경우 5.37%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구체적인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0.1% 미만의 매우 작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일본 전범기업 국민연금 투자 제한

### 평화당 김광수 의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 생명·재산 피해 끼친 기업들도 제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발발한 한·일 경제전쟁의 엄중한 정국 속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6일,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 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

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



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포함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勃發)했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발의 된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안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발표 해도 될 수준 합의 있었다”

### 노영민 靑 비서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정권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에 1+1 안을 제안하면서) 피해자 의사를 미리 확인했었는가”라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등 3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2+1(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배상) 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아이디어 수

준의 많은 제안이 있었다. 공 전 장관과 이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을 내 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제안이든 그것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6~8개월 간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안(1+1)은 이렇지만 이것만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